

#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49 호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차 례

###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308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308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4조)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6조)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2023. 3. 14. 시행)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5일(화)**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세정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 (세정팀)
- ▷ 전 화 : 032)760-7232 [FAX 032)760-7239]
- ▷ 제출서식 : 별첨 서식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를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4조(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 ----- ----- ----- 2026년 12월 31일 -----.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 ----- ----- ----- 2026년 12월 31일 ----- ----- -----.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u>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1. ----- ---- <u>자동납부</u> ----- -----
2. 전자송달 방식과 <u>자동이체</u>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2. ----- <u>자동납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 략)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 ③ (생 략)

### □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 3. 14.>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2023. 3. 14.>

③ ~ ⑤ (생략)

####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삭제 <2023. 3. 14.>

####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을 말하고, “준권장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말하며,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1, 2015.11.23.>

2. ~ 3. <생략>

제3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 ~ 4. <생략>

② <생략>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 20. <생략>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서용]

##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 주민 의견수렴서

[illegible]

